

# 민간재해 예방기관 5곳 중 1곳 '관리부실'

### 고용부, '2022년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924곳 중 C등급 124곳·D등급 82곳...점점 등 불이익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 예방기관 5곳 중 1곳은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2년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1개 분야 924개소 중 206개소(22.2%)가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등급(미흡) 124개소, D등급(불량) 82개소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까지 민간재해 예방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 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 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112개소(12.1%)는 S등급(최우수)을 받았다. 경남안전기술단은 관리 사업장에 대해 작업별로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최근 3년간 관리한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해를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점검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까지 민간재해 예방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 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 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112개소(12.1%)는 S등급(최우수)을 받았다.

반면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관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하위 등급 기관과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위탁사업 수행 기관 선정 시 최저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장 전반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전세사기 대응안... '집주인 정보 확인' 법령 명시 추진

### 세금 체납정보 요구할 근거 명시

정부가 전세사기 발생 예방, 전세사기 대응,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3가지(예방, 대응, 지원) 대책 중 예방과 대응책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지원책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소유했지만, 세금 조차 내지 못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명 '빌라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집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입차인 정보 ▲세금 체납정보를 요구할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동의할 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요구일 이후의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하면 세입자가 정부를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가 꼼꼼히 따져봤지만,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전세금 미반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할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회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조치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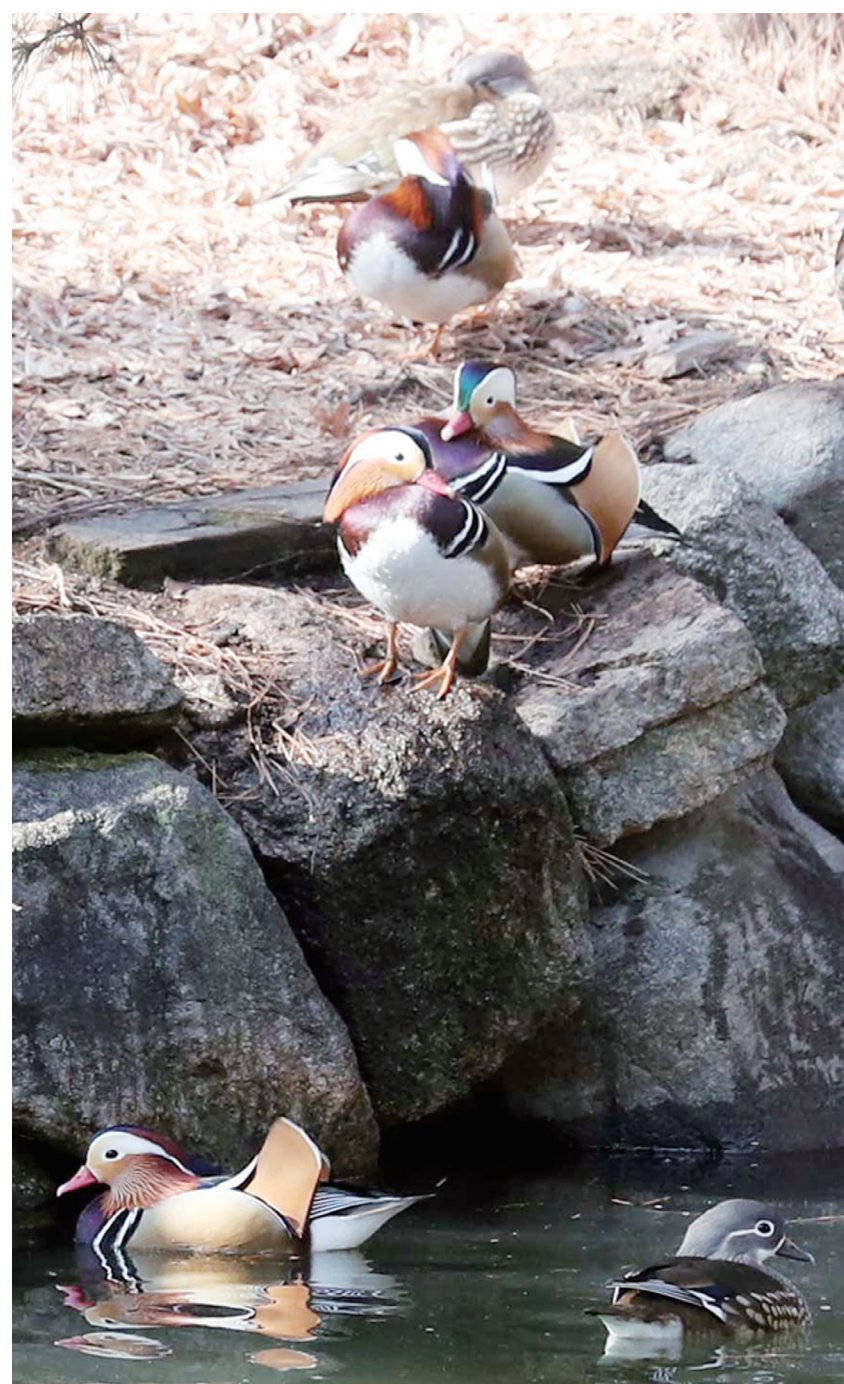
즉 정부는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세입자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책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정부는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올렸다. 최우선 변제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원 올렸다. 서울의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이 됐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가 됐다.

최우선변제금액에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세입자가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괄 500만원 인상한 것이다.

김재환기자



### 봄별 쇠는 원앙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 춘당지에서 원앙들이 봄별을 씹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음주 뺑소니 사망...50대 재심 감형 왜?

무면허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일명 '윤창호법' 위험 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고라니를 친 줄 알았다"는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5일 오전 5시에 전남 무안군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앉아있던 B씨를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치어 10m가량 날아가게 한 뒤 쓰러진 B씨를 깔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2020년 3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같은 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1·2심에서 "새벽 시간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고라니를 친 것으로 여기고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형태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을 충격했다라든가 차를 멈추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탈한 점, 사고 발생 8분 뒤 현장을 지난 신고자는 쓰러진 B씨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도주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2차례)으로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대상자였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사건에 적용된 음주운전 제법의 가중처벌 조항(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8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한다.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전력이 있지만 당시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일명 숙취 운전을 한 점, 만취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다 사고를 당한 B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형을 징역 2년 8개월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광주남부소방, 간담회 및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간담회 실시 및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최이슬기자



### 강진소방, 자체제작 냉각용 특수관창 활용 진압훈련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13일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자체개발·제작한 냉각용 특수 관창을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담양소방,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화재예방 당부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이번 겨울철 기간을 시작으로 화목보일러에 대한 지속적인 화재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무안소방,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완도소방, 필로티 건축물 화재예방대책 추진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필로티 및 가연성 외경재 마감 건축물의 화재시 높은 위험성에 따른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여수경찰, 대중교통회사 교통사고예방홍보 실시

여수경찰 중앙파출소장(경감 김경수)이 13일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회사와 통장단 회의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에 나섰다.

여수=김현근기자